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도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6
----------	------

발의연월일 : 2021. 5. 18.

발의의원 : 도일용 의원 등 10인

1. 주문

가. 일본 정부의 독단적이고 기만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자 한다.

2. 제안이유

가.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였음.

나. 일본의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인접국 뿐 아니라 전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사전 협의나 위험성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도 되지 않은 위험한 행위임.

다. 해양자원은 어느 한 국가 및 한 세대의 소유가 아닌, 전 인류가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하는 공동의 자산으로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임.

라. 이에 27만 달성군민과 달성군의회는 일본의 독단적이고 기만적인 이번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3. 결의문 : 붙임

4. 참고사항

- 결의문 배부 : 대한민국국회의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장관, 외교부장관, 환경부장관, 달성군수, 전국 시·군·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달성군 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일방적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하여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인접국가로서 해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사전 협의나 위험성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도 되지 않은 위험한 행위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당위성과 안정성에 대해 얘기하였으나, 그것은 일본정부의 독단적인 해석과 결정이며, 주변국이 보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자원은 어느 한 국가 및 한 세대의 소유가 아니며 전 인류가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하는 공동의 자산이며, 방류된 오염수에 의해 생태계와 환경이 파괴되면 인접 국가와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27만 달성군민과 달성군의회는 일본의 독단적이고 기만적인 이번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주변국과의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이번결정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2021. 5. 2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